

李대통령 “광주 군공항 이전, 정부가 주관하겠다”

ACC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 토론회
“무안·광주 불신, 국가가 책임질 것”
대통령실 직속 TF 구성해 해결
국방·국토부·지자체 등 6자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광역시를 찾아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후 2시30분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국제회의실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광주·전남 국회의원, 시도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취임 3주 만에 이뤄진 이 대통령의 첫 호남 방문 일정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 과제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제가 민주당 대표 되기 전 때부터 불거져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간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달 대선 당시 대통령께서 광주를 방문해 ‘국가가 주도하고, 대통령이 책임지며, 무한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군공항 이전 3대 원칙을



이재명 대통령(왼쪽부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제시했다”고 말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했다.

강 시장은 “기부대 양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했고, 광주·전남이 함께 무안 통합공항 구상을 발표했으며, 광주시는 1조원 규모의 재정 기여 의지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안공항은 광주·전남의 관문공항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이용객이 광주공항에 비해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며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무안을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강력 추진하고 무안군은 반대해 도지

사로서 입장이 어려웠다”며 “이제는 조정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 국가가 확실히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주면 지역 상생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실패’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군수는 “광주시가 2018년 민간공항 이전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광주시의 약속을 믿기 어렵고, 국가가 주도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군민을 설득할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광주와 무안 간의 입

장 차와 불신을 확인했다”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광주·전남, 무안을 포함한 6자 TF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꾸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안군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군공항을 이전해 발생한 이익이 무안군에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SPC(개발 특수목적법인)에 무안군이 사업자로 직접 참여하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안군에 실현가능한 광주시의 지원방안 마련과 국가 중요기관 전남 유치에 따른 전남도의 부담 등도 주문

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TF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광주시, 전남도(무안 포함) 등 6자 체제로 구성된다. 실무조사, 주민 의견 수렴, 재정지원 방안 검토 등을 통해 연내 이전 방식과 지원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박균택(광산갑) 의원은 “군공항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손익으로 접근할 일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정기획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정성현·정성아 기자

내란특검,尹 전 대통령 출국금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설명이다.

검정서 사건 이첩 후속 절차
공소 유지 주체도 특검 변경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

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작년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올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

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해 출국이 막힌 상태였다.

특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터미널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유) 탐 환경건설



(주) 탐앤제이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20
Tel 062)376-5599 Fax 062)376-0094